

12월 첫째 주(11.27-12.3)

[산업] 서울시, 골목상권 분석 서비스 시범운영 시작

[산업] 서울시, 대리점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통상] 「제2회 한·일 국제중재포럼」, 한국 ISD 제소 위험성 경고

[재정] 삼성병원, 메르스 사태에 대해 정부에 거액의 손실보상 청구

[거시] 3/4분기 실질 GDP, 전기대비 1.3%, 작년동기대비 2.7% 성장

[지역경제] 정부, 청년을 위한 산업단지 추진

□ [산업] 서울시, 골목상권 분석 서비스 시범운영 시작

○ 12.1. 서울시, 「골목상권 자영업자를 위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오픈」

○ 주요 내용

- 서울시는 12월 1일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해 골목상권 정보를 분석·제공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golmok.seoul.go.kr) 시범운영을 시작함
- 골목상권에서 창업수가 많은 외식업종 10개에 대해 구·동 단위로 ‘과밀지수’, ‘활성도지표’, ‘성장성지표’, ‘안정성지표’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 과밀지수는 수요 대비 공급의 포화도로 신규 진입 위험 여부를 제공하는 지표임
- 활성도지표는 유동인구 크기와 상권 내 현재 발생하고 있는 거래건수를 결합하여 산출하여 특정 업종의 거래 활성화 정도를 반영한 지표임
- 성장성지표는 상권의 매출액 증감을 통해 상권 발달성과 집적효과 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임
- 안정성지표는 폐업률(개업 점포 수 대비 폐업 점포 수)과 영업지속기간을 결합하여 생존의 확실성을 의미하는 지표임
- 이상의 지표는 기존 및 예비 자영업자에게 위험지수 및 상권 정보 제공하고, 상권분석 전문가 및 정책관련자에게 빅데이터와 다양한 골목상권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생산된 상권 전체 현황 정보를 상권분석, 정책 집행 및 효과 파악에 활용하도록 제공함

○ 함의 및 전망

- 서울시의 상권분석 서비스 제공은 지난 10월 국세청의 사업자현황 발표 정례화와 함께 창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 뿐 아니라 기존 업자에게도 사업체 운영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하는 정책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향후 일정 기간 동안은 활용도 제고 및 현장에서의 요구를 반영한 정보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자영업자의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진행되기를 기대함

□ [산업] 서울시, 대리점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 12.2. 서울시, 「대리점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주요 내용

-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33개 제조사(대리점 본사) 1,864개 대리점(일반 대리점 1435개, 스크린골프연습장 429개)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그 중 조사에 응답한 1,014개(일반대리점 690개, 스크린골프연습장 324개, 응답률 54.4%) 대리점의 분석 결과를 발표함
- 분석결과 대리점 창업에 필요한 평균 투자비용은 2억 8,600만원, 평균계약기간은 1.5년이며, 재계약시 ‘갱신거절’ 또는 ‘해지위협’을 받은 경험이 일반대리점 응답자 687명 중 138명인 20.1%로 대리점주들의 지위가 불안정한 것으로 분석함
- 본사의 판매목표 설정(58.3%) 및 미이행시 불이익 부과, 일방적 거래조건 변경, 부당한 경영 간섭 등은 여전함
- 대리점 계약서 분석 결과, 본사의 통제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대리점 이전 및 판매인력 등록 시 본사의 간섭, 회계장부 등 경영자료 제출, 물품 공급가격 및 거래조건에 대한 본사의 일방적 결정조항, 본사의 면책조항 등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됨

○ 함의 및 전망

- 서울시의 대리점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서면조사의 한계를 보완하여 공정한 시장거래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조사결과에 기반한 서울시의 공정위 조사 의뢰에 대해 공정위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임
-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서면조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공정위의 조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통상] 후쿠오카 「제2회 한·일 국제중재포럼」, 한국 ISD 제소 위험성 경고

○ 12.2. 매경 A12면 기사, 「ISD 동네북 된 한국…"일관성없는 정책 탓"」

○ 주요 내용

-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외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국제 소송, 이른바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음
- 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 론스타(미국)에 이어 올해 하노칼(네덜란드), 엔텍합(이란) 등 3곳으로부터 ISD를 당했으며, 1990년 합의로 종결된 무기제조사 콜트(미국) 건을 합하면 모두 4건인데, 같은 기간 일본 정부는 없으며, 중국도 2건에 불과함
- 전남 영암의 ‘포물러원(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는 대회 미개최로 인해 장기계약 위반으로

추가 피소 우려가 있음

- 지난달 일본 후쿠오카에서 한국국제중재실무회와 일본중재인협회가 개최한 제2회 한·일 국제중재포럼에서 이상과 같은 우려가 쏟아졌음
- 요시히로 다카토리 일본 변호사는 이날 포럼에서 “스페인 정부는 경제 악화로 태양광사업 보조금을 줄이면서 지난 3년간 30건의 ISD를 당했다”며 “보조금 약속 위반 등을 이유로 한 ISD 제소가 급증하고 있고 한국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신희택 서울국제중재센터 이사장(63·사법연수원 7기)은 “특히 지자체가 애초의 투자 유치 조건을 어기고 계약을 일방 파기하는 행태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는데,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공기업 등의 조치도 모두 ISD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임

○ 합의 및 전망

- 한미 FTA 체결 당시 ISD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으며, ISD 제소가능성이 정책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고 간주할 수 있음
- ISD 제소가능성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는 방법은 한미 FTA 폐기 서한을 미국 정부에 보내는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미국과 상호 간에 ISD 제소 범위를 협의하는 방안은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음
-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정책을 준비할 때 ISD 제소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중요함
- 특히 면밀하게 준비하지 않은 제도일수록 시행 이후 드러나는 한계와 단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ISD 제소가능성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제도를 준비해야 할 것임. 최근 가장 우려되는 사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임. 이 법에서는 서비스업의 범위를 대단히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그만큼 ISD 제소가능성도 높을 수 있기 때문임.

□ [재정] 삼성병원, 메르스 사태에 대해 정부에 거액의 손실보상 청구

○ 12.3. 매경 A38면 기사, 「메르스 복기가 두려운 사람들」

○ 주요 내용

- 메르스 손실 보상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데, 메르스 확산의 주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삼성병원이 정부에 거액의 손실 보상을 청구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 병원 측 주장대로 이 병원의 초기 역학조사와 방역 관리가 적절해 1번 환자 관리가 무결했고 14번 환자가 주된 감염원이었다면, 책임 공방은 14번 환자 정보 제공에 미진했던 정부로 집중됨. 단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점은 메르스 진상규명에 있어 태풍의 핵이며, 작성 중인 감사원 보고서도 이를 우선적으로 규명할 것으로 기대됨
- 삼성병원의 신청 보상액을 정부가 그대로 수용한다면 스스로 모든 책임을 인정하는 것인 반면, 과실을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보상액 산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해야 함
- 그런데 현재 우려되는 것은 정부가 정공법이 아니라 피해가기를 택할 경우임. 즉 이 병원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니 일단 다른 병원만 보상한 후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명목으로 결정을 미루는 경우임.

- 노파심이 드는 것은 보상 논의가 국민에 대한 기만으로 흐를 가능성임. 즉 특정 병원을 배제하자니 병원 측 이의 제기 과정에서 정부에 불리한 새로운 정보가 쏟아져나올 게 걱정되고, 거액을 보상하자니 국민의 공분이 무서워 일단 결정을 미뤄 소나기를 피한 후 차후에 적당히 타협할 가능성임
- 또 하나의 찜찜함은 전문가집단의 침묵인데, 이 병원의 내부 감염 경로와 관리 부실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나 반비판 등 전문가집단의 자성이 활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조용함
- 지금 과제는 방역, 환자 관리, 정보 투명성 등 전반적 문제를 밝혀내고, 이 중 얼마만큼이 시스템적 미비이며, 얼마만큼이 개인의 과실인지를 가려내 개선하는 것임에도, 정보와 지식, 영향력을 가진 공무원과 전문가, 의료기관 간의 암묵적 타협 속에 메르스 사태의 책임이 묻힐 가능성이 있음
- 메르스 사태에 대해 정부와 병원은 공개적이고 치열한 입증을 통해 먼저 진상규명을 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할 것임

○ 합의 및 전망

- 메르스 사태의 뒷수습을 둘러싼 삼성병원과 정부의 모습은 많은 국민들을 당혹하게 함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책임소재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 함. 더구나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인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새삼 요구됨

□ [거시] 3/4분기 실질 GDP, 전기대비 1.3%, 작년동기대비 2.7% 성장

○ 12.3. 한국은행, 3/4분기 실질 GDP 성장률 발표(잠정)

○ 주요 내용

		금년 2/4분기 대비 성장률	작년 3/4분기 대비 성장률	성장 증감요인
국내총생산(GDP)		1.3%	2.7%	
지 출 항 목 별	민 간 소 비	1.2%	2.1%	내구재(승용차)와 비내구재(전기·차량연료) 지출 증가 지속, 준내구재(의류·신발)와 서비스(의료·오락문화) 지출 증가로 전환
	정 부 소 비	1.7%	3.0%	물건비·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증가
	설 비 투 자	5.0%	5.7%	기계·정밀기기·자동차 중심으로 증가
	건 설 투 자	1.8%	6.6%	주거용 건물 건설이 크게 증가
	수 출	-0.6%	0.3%	LCD·선박·화학제품 중심으로 재화수출 감소/지식재산권 사용료·통신·컴퓨터·정보 서비스수출 증가
경 제 활 동 별	수 입	1.1%	3.2%	석탄·석유제품·전기·전자기기 수입 증가, 운수서비스수입 증가
	농 립 어 업	6.5%	-0.7%	벼·과실 재배업 생산 증가/어획량 감소
	제 조 업	0.1%	1.7%	ICT제조업 증가/비ICT제조업 정체
	전기가스수도사업	8.3%	9.5%	원자력발전 증가, 온수·증기 판매 증가
	건 설 업	5.6%	4.6%	주거용 건물 건설이 크게 증가
	서 비 스 업	1.0%	2.6%	
	(도소매음식숙박업)	0.9%	1.4%	자동차·가전제품 및 음식업 판매 증가
	(운수·보관업)	2.3%	2.8%	철도·도로운송 증가
	(금융·보험업)	0.2%	6.5%	금융기관 수수료 수입 증가
	(부동산·임대업)	0.3%	1.6%	부동산 매매 증가, 분양시장 활성화
	(사업서비스업)	1.2%	3.7%	건축·토목 관련 서비스 증가
	(보건·학예·서비스업)	2.0%	4.8%	의료비 지출 증가

○ 합의 및 전망

- 경제성장률이 2/4분기에 비해 내수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개선된 양상을 보임. 특히 전기 대비 負의 성장을 보인 민간소비가 正의 성장으로 전환됨. 투자 또한 설비투자가 전기대비 비교적 큰 폭의 성장을 보이고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 건설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임. 다만 경상수지는 여전히 흑자임에도 선박·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은 전기대비 감소한 반면 석유제품·전기·전자 등의 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GDP성장률 1.3%(전기대비), 2.7%(전년동기대비)에 대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각각 -0.8%p, -1.3%p로 나타남
- 경제활동별(산업부문별)로는 소매업, 음식업, 금융업, 부동산매매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전기가스수도사업과 건설업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증가함. 전반적으로 주택 건설을 중심으로 한 사업부문에서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양상임
- 3/4분기의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2.7%로 나타나는데, 동분기 성장률이 3.2%, 3.3%이었던 2013년과 2014년의 경우 연간 경제성장률이 각각 2.9%와 3.3%이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금년도 연간 경제성장률은 2%대 후반이 될 것으로 전망됨

분기 및 연간 GDP성장률(%)

	2013년					2014년					2015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전기대비	0.6	1.0	0.9	0.9	2.9	1.1	0.5	0.8	0.3	3.3	0.8	0.3	1.3
전년동기대비	2.1	2.7	3.2	3.5		3.9	3.4	3.3	2.7		2.5	2.2	2.7

□ [지역경제] 정부, 청년을 위한 산업단지 추진

○ 12.3. ‘청년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를 만들어드립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주요 내용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청년이 모이는 산업단지 패키지 사업’을 고용부, 산업부, 국토부, 미래부가 내년부터 합동으로 공모할 계획임
- 청년층의 기피가 심각한 노후된 산업단지에 행복주택, 출퇴근버스, 직장어린이집, 산재예방시설, 산학융합 거점공간 등을 패키지 지원하여 청년이 일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것임
- 이는 올해 2월 발표된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인 ‘제조업 혁신 3.0 실행 대책’의 일환임
- 4개 부처 11개 사업을 합동 공모하여 추진하며, 이에 광역지자체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지역 여건에 맞게 감안하여 2개 이내로 제안할 수 있음
- 기존 고용부의 산단형 공동어린이집 사업 등 7개 사업은 유지되나, 고용환경개선시설 용자를 포함한 3개 사업은 제외되고, 근로자를 위한 출퇴근 노선버스 지원과 고가의 ICT설비를 중소기업에 빌려주는 산업단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포함한 4개 사업은 추가됨

<그림> 2016년도 청년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 지원 패키지 사업

부처	2015년	2016년
고용부	<6개> 산단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적극적 산업재해예방시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근로자 건강센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16년 제외) 고용환경개선시설 용자	<5개> 산단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적극적 산업재해예방시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근로자 건강센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산업부	<2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16년 제외)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사업	<3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16년 신설)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16년 신설) 산학융합지구 조성
국토부	<2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건설 (16년 제외) 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	<2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건설 (16년 신설)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산업단지 (16년 신설) 근로자 출·퇴근 노선버스 지원
미래부	<0개>	<1개> (16년 신설) 산업단지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 합의 및 전망

- 국가 산업의 중추기반인 산업단지가 노후되어 낙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합동공모는 중소기업이 많은 산업단지에 젊은 인력 공급을 촉진시켜 인력미스매치 문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이번 사업이 4개 부처의 협업과 더불어 광역지자체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향후 관련 기관의 역량결집과 의지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음
- 향후 사업 진행에서 광역지자체, 입주기업, 사업주 단체, 산단 관리기관으로 구성될 컨소시엄의 활성화와 더불어 현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이 요구됨

□ [금융] IMF, 중국 위안화 SDR 구성 통화로 편입 결정

○ 11.30. IMF 집행위원회, SDR 구성 통화 검토 보도자료

○ 주요 내용

- IMF 집행위원회는 5년마다 SDR(특별인출권) 구성 통화 편입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편입 여부를 결정. 지난 11월 30일 IMF 집행위원회는 위안화가 IMF의 “교역 규모 기준”과 세계적으로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기준 모두를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SDR 구성통화로 편입 결정
- 금번 결정은 1980년 달러, 파운드, 엔, 마르크, 프랑 등 4개 통화로 SDR 구성통화가 결정된 이래 처음 있는 변화(1999년 유로 출범으로 마르크와 프랑은 유로로 바뀜)

○ 합의 및 전망

- 전 연준 의장 버냉키는 12월 1일자 칼럼에서 금번 결정은 상징적인 일일 뿐이라며, 가까운 장래에 위안화가 달러의 라이벌이 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함. 또 달러가 현재와 같은 국제적 지위에 오른 이유는 국제기구나 국제적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는 점을 강조함. 따라서 위안화가 달러와 같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자본 유출입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내 금융규제도 완화하며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금번 결정의 또 다른 의미는 국제금융 의사결정에서 중국의 위상이 제고된 것임. 따라서 위안화 SDR 편입은 그 자체가 아니라 지분이 어느 정도인가가 추가적 관심사항
 - ※ IMF 의사결정은 SDR 지분 보유 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임. 가령, A라는 국가에 구제금융 공급을 할 것인가를 표결하게 되면, 1국 1표가 아니라 해당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SDR 지분이 곧 표가 된다는 것임
- 위안화 SDR 구성통화 지분은 10.92%로 결정되어, 중국은 미국 41.73%, 유로 30.93%에 이어 3번째 지분보유국이 됨. 일본 엔화는 8.33%, 영국 파운드화는 8.09%로 중국 보다 낮게 조정되었음.
-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미국, 유로존에 이어 서열 3위 국제금융 의사결정권 보유국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음. 다만, IMF 의사결정은 85% 찬성을 얻어야 하는 구조여서 10.92%의 중국으로서는 단독 비토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미국과 유로 중심의 IMF 의사결정 거버넌스에 독자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임
- 결국 이번 위안화 SDR 구성통화 편입은 중국이 미국 중심의 국제금융 체계에 협력파트너로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음